

 국 무 조 정 실 국무총리비서실	<h1>보 도 자 료</h1>	2016. 3. 31(목)	
		작 성 문 의	국무조정실 안전정책과장 이용석 (Tel. 044-200-2341) 국무조정실 안전관리과장 신강민 (Tel. 044-200-2346) 국민안전처 안전기획과장 김광용 (Tel. 02-2100-0413) 국민안전처 재난안전산업과장 이명수 (Tel. 02-2100-0459) 국민안전처 자연재난대응과장 이상권 (Tel. 02-2100-0711) 국민안전처 안전점검과장 황범순 (Tel.02-2100-0487)
* 엠바고 : 3월 31일 11시 (회의종료) 이후 사용 / 모두말씀 별도배포 * 공동배포 : 국민안전처			

국민안전 중점과제, 4대 분야 17개 과제 선정 추진

- 총리 주재 '안전관계장관회의' 개최, 안전대책 가시적 성과 도출 추진
 - '안전산업 육성'의 가속화, '봄철 가뭄대책'과 '국가안전 대진단의 차질 없는 이행
- 정부는 3.31일(목)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'안전관계장관회의'를 열어 「국민안전 중점과제 추진계획」, 「안전산업 육성 추진상황」, 「봄철 가뭄대책 추진상황」 및 「국가안전대진단 중간 점검 결과」를 논의하였다.
- * (참석) 교육·문체·환경·해수부·안전처 장관, 국조실장, 농식품·산업·고용·국토부 차관, 기상청장
-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를 바탕으로 안전 혁신 마스터플랜 수립, 분야별 제도개선, 안전점검 체계화 등 안전 관리 시스템은 어느 정도 강화 하였으나,
- 이제부터는 국민의 안전체감도를 높이고 그동안 정부가 수립한 안전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,

- 국무총리 주재로 안전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‘안전관계장관 회의’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안전관련 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안전관련 현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.

국민안전 중점과제 추진계획

- 최근 대형사고를 계기로 안전관리시스템을 혁신하고 분야별 대책을 마련하여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시스템 강화의 성과가 있었으나,
 - 신종레포츠의 등장, 시설물의 노후화·고층화·대형화로 인한 대형 사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,
 - 신종감염병, 서해대교 화재 사고 등 예측할 수 없는 신종 복합재난 발생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안전 체감도가 크게 개선되지 않는 상황(‘15.12, ‘안전하다’ 33.5%)이다.
- 정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“국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사회 실현”을 비전으로 4대 분야 17개 과제를 “국민안전 중점과제”로 선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 나가기로 하였다.
 - 4대 분야는 △안전사고 사망자 감축, △취약계층 안전관리, △안전 사각지대 관리, △고위험 및 중대사고 관리 분야이다.
- 첫째, 선진국에 비해 사망자 수가 높은 분야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획기적으로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 (3개 과제)

① (교통사고) 사고 고위험 요인별로 맞춤형 안전대책*을 마련하고 도로·지하철 교통안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(육상), 선종별 안전대책 등 다중이용선박의 안전관리를 강화(해상), 고위험 유형별로 안전지표화 등 국가항공안전 프로그램 추진(항공)

* 예시) 사업용 자동차 디지털 운행기록 분석, 농촌 고령자를 위한 야광지팡이 보급 등

② (산업재해) 고위험 업종(건설·조선·화학 등) 맞춤형대책(감독관 전담관리제, 위험 경보제 등), 재해다발요인(추락, 기계장비 등) 집중관리 추진

③ (화재) 6층 이상 전층 스프링클러 설치 추진, 화재 대응역량 강화 등

□ 둘째, 안전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안전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. (2개 과제)

- ④ (어린이·노인) 대상별 안전종합계획 마련,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자 제로화,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제공, 노인요양시설 야간근무 인력 배치 강화 등 추진
- ⑤ (장애인) 복지 시설에 대한 분야별(전기, 가스 등) 대진단을 통한 기능 보장 추진 등

□ 셋째,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면서도 관리가 소홀한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안전관리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.(5개 과제)

- ⑥ (연구실) 연구실 설치·운영 가이드라인 마련, 사고관리 지침 제정 및 연구실 안전관리 컨설팅 사업 추진
- ⑦ (지하공간) 지반탐사 조직 확대, 지하안전영향·지반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술자 자격 도입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
- ⑧ (지하도상가)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통해 불허업종 지정, 시설 설치 기준 보완, 재난의무보험 도입
- ⑨ (공연장) 안전점검, 교육·훈련 등 안전관리 선진화 시스템 구축
- ⑩ (신종 레저시설) 번지점프, 쥘라인 등 신종레저 관련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'레저스포츠안전진흥법' 조속 제정

□ 넷째, 안전사고시 중대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분야를 선제적으로 관리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. (7개 과제)

- ⑪ (원전) 안전 환경 최우선 조성(부품 추적관리, 품질검사 현장확인 등)
- ⑫ (위험물·유해화학물질) 미허가 시설 처벌 기준 상향, 위험물질 취급 사업장 안전강화(장외영향평가제 안착, 안전진단 지원 등), 지자체 및 기업의 대응 매뉴얼 마련 등 대응 역량 강화
- ⑬ (에너지)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기업 안전투자 강화 및 원자력·가스·석유 등 에너지원별 안전관리체계 정비·강화
- ⑭ (고층·대형건축물) 안전영향평가제 절차 마련 및 다중 밀집 건축물 붕괴 대비 매뉴얼 개선

- ⑮ (대형교량) 케이블 안전관리 강화 대책, 피뢰·방재시설 설치 등 위기 대응 매뉴얼 강화
- ⑯ (항만) 시설물 안전점검, 건설 현장 특별 점검 및 재해예방 경보시스템 운영, 항만시설 보안 강화
- ⑰ (방역체계) 인력 등 국가방역 인프라 확충, 감염병 예방접종 강화

- 정부는 중점과제별로 **연간 운영 로드맵**을 작성하고, 부처협업을 위한 관계부처 TF 또는 정책협의회 운영을 통해 세부계획을 보완해 나가면서,
 - 안전관계장관회의(국무총리 주재), 안전정책조정회의(안전처 장관 주재) 등을 통해 추진실적을 점검하고, 중점과제 점검과정을 통해 안전 혁신 마스터플랜도 보완·개선해 나갈 계획이다.

안전산업 육성 추진상황

-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3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고된 ‘안전산업 활성화방안’을 토대로 최근 상황을 반영한 ‘안전산업 육성 추진 상황’을 점검하고 논의하였다.
 - 지난해는 안전산업 특수 분류체계 제정, 중견·중소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안전설비 투자펀드 조성(‘15~’17까지 5조원), 안전진단의 민간 개방 등 안전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주력하였으며,
 - 이를 바탕으로 금년부터는 실질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.
- 이를 위해 안전 관련 투자를 늘려나갈 계획이다.
 - 안전대진단과 연계하여 도로·철도 등 주요 노후 시설물의 진단 점검, 보수·보강, 첨단기술 R&D 지원 등 정부 안전투자*를 통해 안전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

* '16년 주요 보수·보강 관련 정부 예산 4.2조원, 에너지·시설·교통, 항만 등 주요 공기업 안전투자 11조원 등

○ 아울러 주요 대기업의 안전투자 촉진, 중소기업 안전 투자 확대, 노후 고속도로·공동주택·재해 위험지구 개선에 민간 투자 등을 통해 민간의 안전투자 확대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.

□ 또한 안전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도 정비 해 나갈 계획이다.

○ 안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*하고, 안전 관련 전문인력 양성, 컨설팅, 보험 등의 안전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.

*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

□ 안전 신기술을 개발하고 해외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다.

○ 첨단기술을 이용, 재난안전관리를 과학화하고, 관련 산업육성을 위해 주요 핵심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.

< 8대 과제 ('16년 447억원) >

- (소방웨어러블 기기) 화재 현장 활용을 위한 데이터 및 음성 통신, 센싱 기술
- (자동차 안전주행 시스템) 글로벌 안전규제 대응 센싱기술 및 안전운전 지원 및 교통사고 저감 기술 개발
- (스마트빅보드) 스마트 센싱기술 재난안전 활용전략 개발
- (건물·선박내 위치인식 및 경보시스템) 선박안전 지원 시스템 및 승객편의 지원 시스템 개발
- (국민안전로봇) 재난 상황에 투입, 방재·구호작업 수행 첨단안전로봇, 부품 기술개발
- (재난안전 공통 플랫폼 기술) 재난감지, 예측, 대응 분야 등에 공통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초 기술 개발
- (안전센서 핵심 기술) 화재, 폭발, 가스누출 등 사고에 적용 가능한 첨단 센서 핵심 기술 개발
- (재난안전분야 무인기 활용) 재난대응현장 드론 운영기술 개발 등

- 그리고, 재난 정보를 산업에 활용하기 위해 각종 재난 안전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개방하고, 안전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각종 사업화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.
- * (사례)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‘가족협력형 농촌부모 안전 돌보미’ 사업(대구시)
- 또한, ODA 프로젝트 지원, 국제 안전 전시회 파견 등 국내 우수 안전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방안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.

봄철 가뭄대책 추진상황

- 이날 회의에서는 **봄철 가뭄 대책**에 대해서도 점검하였다.
 - 금년 봄은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은 편이나, 최근 1년간 누적 강수량이 평년의 75% 수준이고, 저수지 평균 저수율도 77%로 평년(88%) 대비 88% 수준이다.
 - 전국적으로 기상가뭄은 아니나, 당진·보령·서산 등충남 8개 군 지역의 생활 및 공업용수 부족, 경기 강화와 문경·영양 등 일부 시군에서 농업용수 부족 등에 대한 주의단계가 발령된 상황이다.
- 봄철 가뭄대책은 지난해 물관리협의회(15.10.11)에서 **올해 봄 영농기 농업용수 부족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수립**한바 있으며, 지난해 가뭄을 계기로 마련한 주요대책들을 영농철(4월) 이전에 마무리하기로 하였다.
 - 주요 대책으로는 가뭄 취약지역에 지하수 개발, 양수장 설치 등을 통해 용수원을 개발하고, 농업용수 부족이 우려되는 200여개 저수지에 대해서는 인근 하천 수를 이용해 물채우기를 추진할 계획이다.
 - 또한, 4대강 물을 활용한 농업용수 공급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(전체 예정지 20개 소) 올해 중 공주보-예당지, 상주 1지구에 양수장, 도수로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(백제보-보령댐은 2.22 완료).

- 아울러, 농어촌 급수취약지역 지방상수도 확충을 위해 올해 268개소 대상으로 2,947억원을 지원해 수도시설을 설치하고, 해수 담수화 시설 5개소(신설 2개소, 증설 3개소)에 56.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.

국가안전대진단 중간점검 결과

- 회의에서는 2월 15일부터 실시중인 금년도 “국가안전대진단”의 중간 점검결과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.
 - 현재까지 금년도 진단대상 41만개 시설 중 29.8만건의 점검이 완료(73%) 되었으며, 민관합동 점검단 등을 비롯 연인원 14만 5천명이 참여하였다.
 - 또한, 대진단 기간 중 안전신고 15,197건이 접수되었으며, 안전신문고 앱설치 건수도 33,897건에 달했다.
-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여객선, 유·도선, 낚시 어선 등 안전사각지대, 캠핑장, 위험물 제조소, 교량·싱크홀, 급경사지 등 해빙기 위험시설, 삭도·궤도 등을 집중 점검하였다.
 - 이날 회의에서 도출된 보완 사항(형식적 점검, 홍보 강화 및 예산 사전확보 필요 등)은 4월말까지 실시되는 안전대진단, 국가안전대진단 결과보고(5월) 등에 반영해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.